

남북협력동향

(2008. 12. 16 ~ 2009. 3. 15)

■ 개성공단 통행 조치 개선(12. 19, 연합뉴스)

- 12.1 조치로 개성공단 출입시 업체 및 관계자들이 불편을 겪는 가운데 통일부는 통행 조치 개선을 시행
 - 개성공단 출입이 특정 시간대에 몰리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통일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개성공단 생산업체에 우선순위를 두고 출입시간을 조정하기로 결정
 - 정부는 북한의 시간대별 차량 150대 제한 방침에 따라 도라산-개성공단 유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출입 인원이 집중되는 9시와 15시에는 승용차 이용을 금지

■ 북한, 내비게이션 작동 차량 개성공단 출입금지(12. 24, 연합뉴스)

- 북한은 개성공단 출입 차량의 내비게이션과 위성항법장치(GPS)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여 적발시 인원 및 차량을 통행 금지한다고 발표
 - * 이전까지는 압수 및 벌금 부과, 주의조치 선에서 통과 허용했음
- 북한은 12.1 조치에서 불순선전물, 출판물(모든 신문·잡지), CD 등 전자매체를 소지한 인원 및 차량 통행을 금지한 바 있으며 이번에 그 범위를 확대하였음

■ 북한군 총참모부, 대남 ‘전면 대결태세’ 발표(1. 17, 조선중앙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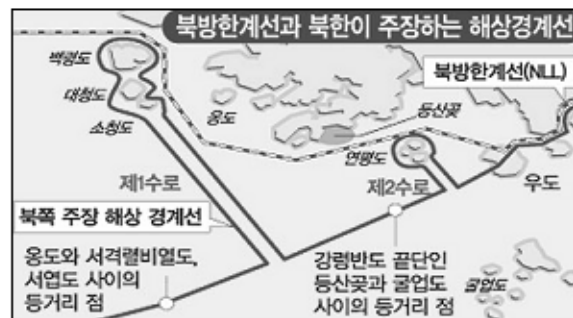
- 북한 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17일 조선중앙TV에 출연하여 “남한 정부와 전면적 대결 태세에 진입”할 것이라고 발표

- 구체적으로 북한군은 ①남한과 전면적 대결태세에 진입할 것, ②남측의 대북 적대정책에 대응하여 강력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할 것, ③서해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서해 북방한계선 현황

- 1953년 8월, 유엔군 사령부와 북한은 휴전 협정 체결 시 육상에 관한 경계는 설정했지만 해상에 관한 경계는 정해지지 않았음.
- 1953년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클라크(Mark Wayne Clark)사령관은 당시 해상에 관한 북방한계선을 설정하여 대한민국 군대의 북방 진출에 한계선을 설정하였음
- 북한은 북방한계선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99년 6월 남한과 서해상에서 무력 충돌한 이후 무효를 주장하였음. 북한은 당시 서해 격렬비열도부터 등산곶까지의 수역 대부분을 북한 관할로 하는 새로운 군사분계선(지도 참조)을 주장하였음

- 이후 인민군 해군사령부는 2000년 3월 '서해 5개섬 동향 질서'를 발표하고 백령도와 연평도로 출입항하는 2개 수로를 지정해 함정과 민간 선박이 이곳으로만 다녀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북한, 대미관계 정상화와 핵문제는 별개(1. 17,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17일, 북미관계가 정상화된다고 해도 미국의 핵위협이 지속되는 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
- * 최근 북한을 방문(1. 12 - 17)한 셀리그 해리슨 미 국제정책센터(CIP) 국장은 17일 북한관리들이 30.8kg의 플루토늄을 무기화(약 4-5개 핵무기로 추정)했다고 전함

- 이에 앞선 1.13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비핵화보다 북미관계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남북한 전역에 대한 핵사찰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6자회담이 진전되어야 할 것”이라고 대응하고, 힐러리 미 국무장관 후보자도 “관계정상화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밝힘
- 우리 정부(외교통상부)도 1.15일 공식 논평을 통해 “북한의 한반도 전역에 대한 검증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을 완전히 제거해 우리와 동등한 자격을 획득한 이후에나 논의하자고 하는 것이 순서”라고 반박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남북협력기금 5개 사업 지원 의결(1. 21, 통일부)

- 정부는 1. 13일~1. 19일 올해 첫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안건을 서면 심의하고, 이산가족 교류 촉진 사업 등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 131억 2천만원을 지원하기로 의결
- 구체적으로 ①이산가족 교류촉진 지원 ②겨레말 큰사전 편찬사업 지원 ③ 개성공단 관리 위원회 소요경비 대출 ④ 2009년도 남북교류협회사무소 운영경비에 대한 지원 ⑤ 2009년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운영경비 및 지하자원개발 관련 조사연구비 지원 등 총 5건에 대하여 지원 결정

■ 유엔개발계획(UNDP) 대북 사업 재개(1. 23, 연합뉴스)

- 유엔개발계획(UNDP)은 2년 가까이 중단되어 온 대북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
- 주 유엔 대표부 관계자는 “집행이사회 최종 승인이 남에 따라 3월 초 쯤에는 북한에 UNDP 사무소가 다시 문을 열 것”이라고 밝힘
- UNDP 집행이사회는 북한 사업에 대한 “독립적 회계감사, 경화(Hard Currency) 지급 방식 변경, 북한 현지직원 선발절차 개선, 사업내용 조정”이라는 대북 사업 재개를 위한 4대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판단하여 최종 승인하게 됐다고 전함
- * UNDP는 지난 1981년부터 농경지 복구, 인적자원 개발, 경제개혁 지원 등 다양한 대북 지원사업을 벌여오다 2007. 1월 미국측이 자금전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해 3월부터 사업을 중단했고, 5월에는 북한 사무소도 폐쇄한 바 있음.

■ 북한, 휴대전화 서비스 12월 개시(1.25, 도쿄신문)

- 이집트 CHEO 테크놀로지*와 북한 체신성이 각각 75:25의 비율로 합작한 '고려링크'의 제 3세대 방식 휴대전화 서비스가 작년 12월 15일 '고려통신'에 의해 개시되었음
- * CHEO 테크놀로지: 이집트 통신사인 오라스콤텔레콤의 자회사
- 당초 작년 5월 개시될 예정이었으나, 도청시스템의 성능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 지연되었음
- 북한의 휴대전화망은 1990년대 후반부터 태국 록슬리그룹이 참여한 록스팩과 북한 조선 체신회사가 지분 투자한 '동북아전기통신회사(NEAT.T)'에 의해 운용되었으나, 2004년 4월 용천역 폭발사고 직후 중단됨. 이 후 2008년 12월 15일 '고려통신'에 의해 재개되었음
- 고려통신은 2008년부터 3년간 4억 달러를 투자해 2012년엔 가입자 10만명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이동통신 서비스는 평양 이외 지역과는 통화할 수 없는 상태이며, 휴대전화기가 대당 약 500유로로 비싸 가입자가 대폭 늘어날지는 불투명

■ 북한 조평통, 정치·군사적 남북합의 무효화 선언(1. 30,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30일 남북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된 합의 사항의 무효화를 일방 선언하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상의 서해 해상 군사 경계선 관련 조항을 폐기한다는 성명을 발표
-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대남 및 통일관련 정책·성명을 발표하는 조선노동당의 지도를 받는 사회단체임
- 조평통은 “지난 시기 채택된 합의들에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 존중문제, 비방중상 중지문제, 무력충돌방지 등 정치군사적 대결 해소 관련 문제들이 반영되어 있다” 고 언급
- 우리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 성명에 대해 유감 표명

-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는 쌍방향합의에 의해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며, 북방한계선(NLL)은 새로운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준수되어야 한다고 밝힘

○ 로버트 우드 미국무부 부대변인은 “북한의 이러한 공세는 분명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

■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위원회 구성(2.1, 조선중앙방송)

○ 북한은 오는 3월 8일 실시할 예정인 대의원 선거를 위해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선거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2.1일 도, 시, 군 선거위원회와 군사부문 선거위원회를 구성함

- *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서 대의원 선거는 선거일 두달전 공고, 공고 후 10일 이내 중앙선거위원회 구성, 선거일 15일 전 선거인 명부 작성과 공시, 선거일 3일 전 후보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침

○ 북한은 2.1일 제 333호 선거구 선거자대회를 갖고 김정일 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로 결정

■ 미국, 미사일 WMD 확산 관련 3개 북한 기업 제재(2. 2, 미 연방관보)

○ 미 국무부는 연방관보(Federal Register/Vol.74, No.20)를 통하여 미사일 및 대량 파괴무기(WMD) 확산 활동에 개입해온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 등 3개 북한 회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

- 미 국무부는 미사일 및 관련 기술 거래 개입을 이유로 북한의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 모콩(Mokong) 무역회사, '시노-키(Sino-Ki)' 등 3개 회사와 중국의 2개 회사에 대하여 무기수출금지법 등에 따른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힘

* KOMID가 역대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 대상으로 포함된 것은 이번이 8번째이나, Mokong, Sino-Ki가 포함된 것은 처음임

- 국무부는 또한 WMD 확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의 KOMID, 목송(Moksong), Sino-Ki 등 3개 회사와 이란의 사히드 바케리 인더스트리얼 그룹(SGB)에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힘

* 모콩(Mokong)과 목송(Moksong)은 같은 기업으로 추정

○ 주요 제재 조치

- 제재 대상 기업의 대미 수출금지
- 향후 2년간 미국 정부 조달 사업 참여 제한

■ 현대아산, “두달 내 관광재개 안되면 재정적 한계”(2. 4, 연합뉴스)

- 현대아산 조진식 사장은 창립 1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4월까지 북한 관광사업이 재개되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고 밝힘
- 현대아산은 지난해 7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데 이어 11월 개성 관광마저 중단되면서 930억원의 매출 손실을 입었고, 1천 84명에 이르던 인력중 605여명을 감축하는 등 비상경영을 해 왔음.

■ 정부, 남북언론단체 기사교류사업 불허(2. 4, NK조선)

-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는 6.15 북측위원회 언론분과위원회와의 기사교류사업을 위해 통일부에 '사회문화협력사업자' 승인 신청을 했지만, 지난달 30일 불허 통보를 받음
- 정부 당국은 “순수한 의미의 기사교류를 막으려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남북 단체들이 추진하는 기사교류가 북한이 대남 메시지를 전하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봤다”고 말함

■ 북한, 북미 양자협상 선호(2. 7, 연합뉴스)

-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북한 방문을 마치고 베이징에 도착한 미국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협상을 선호하고 있다”고 밝힘
- *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대사와 모튼 아브라모위츠 전 국무부 차관보, 조너선 폴락 해군대학 교수, 리언 시절 동북아안보협력프로그램 국장 등 7명의 북한 전문가들이 외무성, 무역성, 인민군 등 북한의 고위관리들과 10여 차례 회담을 가짐

- 방북단의 일원인 조너선 폴락 미 해군대학 교수는 “북한은 북핵 6자회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만, 다자 협상보다는 북미간 직접 대화를 선호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함
-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와 관련, “우리가 미사일 발사 추진에 우려를 표명했지만 북한 관리들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기다려보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아무런 위협도 아니다 라고 말했다.”고 전함

■ 미 국방부, 구매관련 대북제재 해제(1. 15 미 연방관보, 2. 11, 연합뉴스)

- 미 국방부는 지난 달 21일 미국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테러지원국가나 단체가 소유, 통제하는 회사와는 구매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방부의 연방구매세칙에서 북한을 삭제함
- 국방부의 이 같은 조치는 미국 정부가 작년 10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함에 따라 이뤄진 최초의 조치로, 이에 따라 국방부의 구매제한 조항이 계속 적용되는 국가는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 등 4개국으로 줄어들음

■ 미 국가정보국, 북한 체제위협 없으면 핵 사용 않을 것(2. 12, 연합뉴스)

- 테니스 블레이어 미 국가정보국장은 12일 상원 정보위원회의 '국가위협평가' 청문회 서면 자료를 통해 북한은 김정일 체제가 생존위협을 느끼지 않으면 미국을 겨냥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미 국가정보국(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국가안전보장국(NSA), 국방정보국(DIA), 국가정찰처(NRO) 등 15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미국의 최고 정보기관

- 블레이어 국장은 “북한의 핵야욕과 확산행동이 동아시아를 불안하도록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북한은 핵무기를 전쟁보다 전쟁억지, 국제적 지위, 강제적인 외교수단으로 간주하는 것 같다”면서 “어떤 제한된 상황에서만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함

- 또한 블레이어 국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작년 8월 뇌졸중을 앓았지만 지금은 상당히 건강을 회복,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직접 결정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힘

■ 미 국무장관, 북한 핵프로그램 폐기시 관계정상화(2. 14, CNN)

-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13일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에서 연설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면 북한과 영구적인 평화를 모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힘
- 클린턴 장관은 '북한은 남한에 대해 도발행위나 도움이 되지 않는 공격적인 발언을 해서 안 된다'고 경고하는 한편,
- 북한이 진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그리고 검증 가능하게 폐기할 준비가 되면, 오바마 정부가 ① 북미관계 정상화, ② 정전협정을 영구평화조약으로 교체 ③ 에너지 및 경제적 인센티브 보상 등의 혜택을 기꺼이 제공할 것임을 밝힘

■ 클린턴, “부시 제네바 합의 파기” 비판(2. 16, 미 국무부)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조지 부시 행정부가 지난 2002년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생산 의혹 정보를 구실로 1994년 제네바 합의를 파기한 것을 비판하고, 북한이 비핵화에 동참할 경우 미국은 북한을 기꺼이 도울 것이라고 밝힘
- 클린턴 장관은 2002년 북한의 비밀 핵프로그램이 충분한 위협이 된다고 결론 낼 만큼의 증거가 없었다고 밝히면서, 제네바 합의가 파기되자 북한이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플루토늄 재처리를 시작했고 핵무기를 갖게 되었다고 말함

■ 대북지원 민간단체 대상 기금지원 제도 설명회 개최(2. 19)

- 수출입은행은 2. 19일 통일부와 공동으로 “2009년 대북지원 민간단체 대상 기금지원 제도 설명회”를 개최함
- 이 날 설명회에는 81개 대북지원 민간단체 실무자 120명이 참석 하였으며, 민간단체 기금지원 방향, 기금지원심사 평가지침 및 신청서류 작성 안내, 기금 집행·정산 관련 주요 제도개선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

■ 보즈워스, 대북특사로 임명(2. 20, NK조선, 연합뉴스)

-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2. 20일 한, 미 외교장관회담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미 대사를 대북특사로 임명한다고 발표하고, 북한의 고위급 인사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보즈워스 특사는 미국 국무부의 전반적인 북한 비핵화 노력을 조정하는 일을 맡게 된다”고 말하면서, “6자 회담과 관련해서 북한은 물론 다른 당사국들과 고위급 접촉을 촉진하게 된다”고 밝힘

■ 조선펀드, 5천만달러 대북투자 유치 추진(2. 24)

- 대북투자펀드인 '조선펀드(Chosun Fund)'의 설립자인 영국인 사업가 콜린 맥아스킬(69)은 조선펀드가 광산, 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해 5천만달러 규모의 대북투자 유치에 나섰다”고 밝힘
- 맥아스킬은 1987년부터 개발 가능성이 있는 북한 프로젝트에 대해 협의해왔으며, 미국 정부의 제재로 국제 은행들에 예치된 북한 돈이 동결된 뒤 대북투자 펀드 계획을 접었으나, 미국 정부가 작년 10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자 대북투자자 모집을 재개했음을 밝힘

■ 통일부, 개성제품 공동상표 등록신청(2. 26, NK조선)

- 통일부는 지난 달 특허청에 개성공단 공동 브랜드 '피스웍스(PEACEWORKS)'에 대한 상표 등록 신청을 했으며, 내년부터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정부는 기술력과 생산력을 갖추고도 독자 브랜드를 갖지 못해 기업 성장과 마케팅에 한계가 있는 개성공단 내 중소기업들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공동브랜드 개발을 추진해왔으며, 공동 브랜드 사용은 의무가 아닌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의 선택 사항임

■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에 성 김 북핵특사 (2. 27, 연합뉴스)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 26일 기자회견에서 “성 김 특사가 앞으로 6자회담 대표단을 이끌게 되며,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특사와 협력해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갖는 등 일상적인 업무를 채길 것”이라고 밝힘

■ 통일부, 개성공업지구 노동세칙 일방 통보 보도 관련 해명(3. 4, 통일부)

- 통일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세칙을 일방 통보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해명자료를 배포함
- 통일부는 북한이 「개성공업지구 노동세칙」중 채용·해고, 노동시간·휴식, 노동보호 분야를 08.10.1일에, 노동보수 분야를 08.12.16일에 시행(노동중개·제재 분야는 계속 협의)하겠다고 전달해 왔음을 밝힘
 - ※ 「개성공업지구 노동세칙」은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2003.9.18제정)」의 하위법령으로 △채용·해고 △노동시간·휴식 △노동보호 △노동보수 △노동중개·제재 등 5개 분야로 구성
- 또한 북측이 07.11.27일 '노동세칙'을 최초 통보하였으며, 이후 남북간 15차례의 협의를 거쳐 남측 입장의 대부분이 반영된 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힘
- '임금체불시 최고 2,000달러 벌금 부과 및 체불시 영업정지'와 관련해서는, 동 제제가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제 46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시행세칙에 새로 규정된 것이 아님을 밝힘
- 노동중개 및 제재분야는 계속 협의 중인 바,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

■ 북한, 동해 영공 민항기 안전담보 못해(3. 5,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9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되는 한미 '키 리졸브' 합동 군사연습 기간동안 동해상 영공 주변을 통과하는 남측 민용 항공기들의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 성명은 이번 군사연습이 “정치, 군사적 충돌방지와 관련한 남북간 합의가 전면 무효화된 상태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임의의 순간에 실전으로 넘어갈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전쟁 행동”이라고 주장
- 국내외 항공사들은 이번 성명으로 인해 기존의 캄차카 항로(동부 시베리아 항로) 대신 북태평양 항로 등 우회항로를 이용

■ 북한 대의원 선거 실시(3. 9, NK조선)

- 남한의 국회의원 총선거에 해당하는 북한의 제 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3. 8 일 실시됨
- 북한 중앙선거위원회는 “8일 18시 현재 다른 나라에 있거나 먼바다에 나가 일하고 있는 선거자들을 제외하고 선거자 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들이 투표에 참가했다”고 발표

■ 북한, 군 통신선 차단...개성공단 출입 마비(3. 9, 연합뉴스)

-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3. 9일 새벽에 '키 리졸브'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되는 9일부터 20일까지 군 통신선(동해지구 3회선)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힘
- ※ 군 통신선은 동해 및 서해 지구 남북관리구역의 양측 군 상황실을 연결한 전화로, 2000년 총 9회선이 개설된 이후 서해지구 6회선은 작년 5월부터 단절되었으며, 북한의 이번 조치로 동해지구 3회선까지 단절됨
- 이번 조치로 개성공단의 인력과 물자·차량 출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입주 기업들의 생산·납기 차질이 우려되며, 중장기적으로 발주자 주문 감소 및 기업 신용도 하락이 예상됨

■ 북한, 내달 4~8일 중 '광명성 2호' 발사 계획 통보(3. 13, 연합뉴스)

- 북한은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다음달 4~8일, 오전11시~오후4시(한국 시각) 사이에 동해와 태평양 각 한 좌표 상에 광명성 2호를 발사한다”고 통보함

- IMO는 12일 “북한 정부의 요청으로 실험용 통신위성 광명성 2호에 대한 정보를 회원국들에게 알린다”고 발표함
- ICAO는 13일 “북한으로부터 장기 우주개발 계획에 따라 위성 발사를 추진하겠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다”고 밝힘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운반 로켓 은하 2호로 발사하기 위한 준비사업의 일환으로 IMO와 ICAO에 비행기와 선박들의 항행 안전에 필요한 자료들을 통보했다”고 발표함
- 통신은 “북한이 최근 우주탐사와 이용 국가들의 활동원칙에 관한 조약(외기권 조약)과 우주공간으로 쏘아 올린 물체들의 등록에 관한 협약(우주물체등록협약)에 가입했다”며 “평화적인 우주과학 연구와 위성발사 분야에서 국제적인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함
- ※ 북한은 지난 1998년 자신들이 '광명성 1호'라고 주장하는 '대포동 1호' 발사 때는 이 같은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